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 대부업 막히면 불법사채 ‘우려’

m-커버스토리 ‘고금리 늪’

2금융권 대출 축소로 취약층 이동
대부업 이용자·잔액 다시 증가세
조달금리 내려도 대출금리는 올라
전문가 “공급 축소만으론 해법 아냐”

제2 금융권까지 대출 공급이 줄어들자 취약차주들이 금리(법정최고금리 연 20%)가 높은 대부업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부 되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제2금융권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무작정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대부업 이용자·대출잔액 ↑

25일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 2024년 말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이용자수가 2023년(72만8000명), 2024년(70만8000명)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 역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25년 6월말 12조4553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120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2조2000억원까지 내려



금융권 대출규제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앉았던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하반기(12조3000억원)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6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체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3개로,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민 금리 부담 여전

이처럼 대부업권의 몸집이 커지는 배경은 조달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말 1%에서 2022년 3.25%, 2023년 말 3.5%까지 치솟다가 2024년 3%, 2025년 2.5%까지 떨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부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다.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14.7%에서 2023년 말 14.3%, 2024년 말 13.9%까지 떨어지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4.0%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했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마저 넘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악화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불

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신용 공급 축소만이 해답 아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두고 금융권의 신용 공급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테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은 연체 위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기반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연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별개로 자금 융통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히 저신용 차주군을 중심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오연구위원은 은행업권의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체율은 업권 관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차주의 상환 여건 및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권의 건전성은 개선되더라도, 이는 상당 규모의 금융 배제자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소비위축 등 자영업자 5년만에 ‘최대 감소’…하나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17.8조로 확대

총 562만명, 1년 새 3만8000명 줄어
고금리·인건비 상승·내수부진 겹쳐
청년 3만 명 넘게 감소하며 타격 집중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전년대비 3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총 56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도 자영업자 수는 2024년보다 3만 8000명 줄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래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는 2020년에 -7만5000명, 2021년에 -1만8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등 회복세를 나타내던 바 있다. 하지만 2024년(-3만2000명)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엔데믹 전환 이후의 고금리 기조,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나섰으나, 이미 위축된 자영업 경기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 타격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만에 3만3000명이나 감소했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문의’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30대 역시 2023년 -1000명, 2024년 -3만5000명 등 3년째 줄고 있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많이 감소했다. 30대에선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감소가 많았다.

40대는 3000명, 5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6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증가 폭은 2022년 11만3000명에서 2023년 7만5000명, 2024년 2만3000명으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청년의 창업 관심 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기반 업종도 청년창업 관심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

당초 계획보다 1.6조 늘려 운영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3일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2026년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1조 6000억원 증액된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자금 흐름을 미래성장·혁신분야로 이전하고, 그룹의 대전환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첨단·벤처·혁신기업 및 지방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집중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하나금융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통해 2026년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첨단인프라 및 인공지능(AI) 분야 2조5000억원 ▲모험자본·지역균형

발전 등 직접투자 2조5000억원 ▲경제성장전략을 반영한 핵심 첨단산업 242개 업종 10조원 ▲K·밸류체인·수출공급망 지원 2조8000억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관계사별 추진계획 검토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주요 이슈사항 및 협업 요청사항 공유 등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해당 임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해 그룹 차원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추진계획을 그룹 전체의 목표로 만들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해 이미 시행한 조직개편 외에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위험자본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생산적 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상체계 점검 등 그룹 전반의 실행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강성욱 하나금융그룹 투자·생산적금융부문 부회장이(왼쪽 네번째)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